

김기현 “당내 문제에 대통령 언급 부적절”...인요한 직격

“당 대표 처신 당 대표가 알아서...” 혁신위 압박에 불쾌감 혁신위 제시 안전도 의결 않고 공관위 구성 이후로 미뤄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16일 인요한 혁신위 원장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암시하면서 당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들의 ‘용퇴’를 거듭 압박하자 이날 인 위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인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둬들이라’는 신호가 왔다”고 밝힌 데 대해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직·간접적으로 요구 중인 김 대표의 불출마 혹은 수도권 합치 출마에 대해서도 “당 대표의 처신은 당 대표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진·친윤(친윤석열) 용퇴 등 혁신안에 윤 대통령의 뜻이 실려 있다며 압박에 나선 혁신위 행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김 대표는 “당 지도부가 공식 기구와 당내 구성원과 잘 협의해 총선 준비를 하고 당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이 있고, 그것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 “혁신위도 그 공식 기구 중 하나”라고 선을 그으면서 “혁신위가 제안하는 여러 발전적 대안에 대해선 존중하고 그것이 공식 기구를 통해 논의되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지도부가 더 이상 혁신위에 끌려가는 모습으로만 비치지 않고 당 공식 기구를 통해 ‘질서 있는 쇄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최고위에 정년비례 50% 공천 의무화 등 혁신위 안건이 보고됐으나 지도부가 ‘존중한다’는 입장만 밝히고 의결하지 않은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지도부는 각종 혁신안을 총선기획단, 공천관리위원회 등 당 공식 기구로 넘겨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과정에서 ‘지도부 중심’의 총선 준비로 혁신위에 쏠린 당내 무게중심을 바로잡고 국민 전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총선기획단과 공관위 등을 통해 혁신위보다 더한 인적 쇄신을 김 대표가 이끌 것”이라며 “당무감사를 통해 실적이 저조한 사람들은 모두 체내고, 호남·청년 등 새로운 영입 인재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출범한 총선기획단은 16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총선 밀그림’ 작업에 착수한다. 공관위는 다음 달 중 구성하는 게 목표다.

지도부는 총선기획단과 공관위를 통한 고강도 인적 쇄신을 준비하고 있다. 혁신위가 요구하는 중진·친윤 불출마 혹은 수도권 합치 출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의 방안도 반영하기로 했다.

지도부의 인적 쇄신 방안을 담은 공천 룰은 공관위 출범 후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인적 쇄신과 맞물려 돌아가는 인재 영입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일 출범한 인재영입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새 얼굴 찾기’를 시작한다. 인재영입위는 각계 추천 인사를 검토한 뒤, 정기국회 종료 후 순차적으로 영입 인재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처럼 총선 준비 본격화에 나선 지도부는 이준석 전 대표 등 당 일각에서 거론하는 ‘비대위 전환설’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BBS 라디오에서 “1~2주 사이에 김기현 대표 거취가 정리되고 나면 어르신 보수층에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해야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환영 리셉션에서 각국 정상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는 식으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있다”며 “한 장관이 안 되면 원희룡 장관 정도로 지도 체제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한 당직자는 “김 대표가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는 한 비대위원장 임명은 당 대표의 권한”이라며 “현 상황에서 당헌 당규상 비대위 출범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尹 “APEC 중심 세계경제 연결성 가속화해야”

APEC CEO 서밋 기조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중심이 돼 세계 경제의 연결성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연결과 이를 통한 가치 창출은 아직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해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 강화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PEC이 지금까지 역대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해 왔던 점을 평가하며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과 위상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과거 위기에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협력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야말로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분야와 관련해서는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과 자유계약 질서를 구축했던 점을 본받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국내 거래, 국제 거래할 것 없이 디

지탈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하다”며 “유엔과 함께 APEC은 디지털 규범을 논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에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 5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으며, 국제 사회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미래 세대 분야에서는 APEC 지역 인구의 3분의 1이 24세 이하의 젊은 층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 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보장하자”며 “역내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학회, 워크숍 참석, 연구개발 기획 등을 위해 APEC 회원국 방문 시 비자 면제와 신속한 출입국 지원 등을 꼽았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 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노 켈릭 사장, 사트야 나텔라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등 1200명이 참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힘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 발의...“6년간 재정혜택 유지”

2026년 지방선거 땐 ‘김포구청장’ “농어촌 특별전형은 2030년까지”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16일 발의했다.

당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정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법안에 서명한 사실상 당론 발의 형태다.

약칭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인 이 법안은 내년 중 국회 처리가 목표,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은 2025년 ‘서울시 김포구’가 돼도 2030년 말까지 6년 동안 유효하다.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 역시 김포구 내 동(洞)으로 전환해도 2030년 말까지 유지된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행정조직(고시, 처분, 신청, 신고 등)과 경기도 소속으로서 받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2030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특별법이 2025년 초 시행돼도 그해 말까지는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임시로 적용한다. 반대로 서울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김포는 1년 동안 예외다.

만약 법이 시행되고 유예 또는 예외 기간 등이 지나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의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김포구청장과 시·구의회의 의원을 뽑게 된다.

특별법상 각종 유예기간을 두는 ‘단계적 통합’은 전날 특위와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

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조 위원장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다만, 특위가 검토하던 구리·하남 등 다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은 이번 특별법에 담기지 않았다.

당일이 ‘선거를 위한 표몰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대우할 가치가 없다”며 “이슈를 선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마 집에 가서 맨날 이불 쓰고 통곡하고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 한 초강력 메가시티 공약을 자기 부정하면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특위는 서울과 함께 부산·광주 등 지역 거점 도시를 ‘메가시티’로 확대하는 특별법도 준비 중이다.

당장 부산과 경남을 합친 ‘부·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은 높은 재정자립도와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포함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저축,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행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